

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시설 - 연구시설 ② 방재시설 - 유수지 ③ 유통·공급시설 - 시장
- ④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⑤ 교통시설 -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 ①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③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④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 ④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ㄱ)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ㄴ)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 ① ㄱ: 30, ㄴ: 3 ② ㄱ: 30, ㄴ: 5 ③ ㄱ: 30, ㄴ: 7
- ④ ㄱ: 50, ㄴ: 3 ⑤ ㄱ: 50, ㄴ: 5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ㄴ.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 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가)결정의 고시일부터 (나)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나)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가)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① 가: 도시·군기본계획, 나: 3년 ② 가: 도시·군기본계획, 나: 5년
- ③ 가: 도시·군관리계획, 나: 1년 ④ 가: 도시·군관리계획, 나: 3년
- ⑤ 가: 도시·군관리계획, 나: 5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 ④ 준공업지역 ⑤ 준주거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 ③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 ⑤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 ④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②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 ④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르.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① 가, 다
- ② 나, 르
- ③ 가, 나, 다
- ④ 나, 다, 르
- ⑤ 가, 나, 다, 르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⑤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주택의 지번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ㄹ. 용도지역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 ②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③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 ②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 ②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 ④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 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2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②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③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6.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자치시장 ② 광역시장 ③ 특별자치도지사
- ④ 시장 ⑤ 군수

2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 ②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가: 30일, 나: 2분의 1 ② 가: 30일, 나: 3분의 2 ③ 가: 60일, 나: 2분의 1
- ④ 가: 60일, 나: 3분의 2 ⑤ 가: 90일, 나: 3분의 2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②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③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 ⑤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2.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②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⑤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 ②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 ④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⑤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ㄱ. 광장	ㄴ. 구거(溝渠)	ㄷ. 놀이터
ㄴ. 녹지	ㄹ. 공동구	ㅁ. 마을회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ㅁ
- ④ ㄴ, ㄹ
- ⑤ ㄹ, ㅁ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① 도시재개발사업
- ② 주택재건축사업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⑤ 도시재생사업

43. (주)감평은 20×1년 중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80,000을 최초 인식하였다. 20×1년 말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65,000으로 하락하였다. 공정가치 변동 중 ₩5,000은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감평의 신용위험 변동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는 않는다.)

- ① ₩10,000 감소 ② ₩5,000 감소 ③ 영향없음
 ④ ₩5,000 증가 ⑤ ₩10,000 증가

44.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②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③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④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45.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산은?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
-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수 없다.
-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이다.

- ① 특허권 ② 회원권 ③ 영업권 ④ 라이선스 ⑤ 가상화폐

46. (주)감평의 20×1년 중 발생한 자본항목 사건이다.

○ 무상증자 시행	₩500	○ 주식배당 결의	₩300
○ 자기주식 취득	600	○ 자기주식 소각	600
○ 당기순이익 발생	1,000	○ 기타포괄이익 발생	800

20×1년 초 (주)감평의 자본은 ₩10,000이고 이 외에 자본항목 사건은 없다고 가정할 때, 20×1년 말 (주)감평의 자본은?

- ① ₩10,400 ② ₩11,000 ③ ₩11,200 ④ ₩11,600 ⑤ ₩11,800

47. (주)감평은 20×1년 초 해지불능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자산(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과 리스부채(리스기간 5년, 매년 말 정기리스료 ₩13,870,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 무상이전 약정)를 각각 ₩50,000씩 인식하였다. 리스계약의 내재이자율은 연 12%이고 (주)감평은 리스회사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는 ₩35,000이다. 동 리스계약이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 ① ₩5,000 감소 ② ₩6,000 감소 ③ ₩15,000 감소
 ④ ₩16,000 감소 ⑤ ₩21,000 감소

48. (주)감평은 20×1년부터 제품판매 ₩5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제품판매 대가로 ₩10,000을 수취하였다. 포인트는 20×2년부터 (주)감평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이행약속은 (주)감평의 중요한 수행의무이다. (주)감평은 포인트 1점당 ₩0.7으로 측정하고, 20×1년 부여된 포인트 중 75%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였다. 포인트가 없을 때 20×1년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9,450이다.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주)감평이 판매대가 ₩10,000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포인트 관련 이연수익(부채)은?

- ① ₩1,000 ② ₩1,050 ③ ₩1,450 ④ ₩1,550 ⑤ ₩2,000

49. (주)감평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창고가 작아 기말 현재 외부에 보관중인 (주)감평의 원재료
- ㄴ. (주)감평이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 ㄷ. (주)감평이 고객에게 인도하고 기말 현재 고객이 사용의사를 표시한 시용품
- ㄹ. (주)감평이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품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50. (주)감평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인 전환상환우선주(액면배당을 연 2%, 매년 말 배당지급)를 액면발행 하였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시 조달한 현금 중 금융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80,000이고 나머지는 자본요소(전환권)이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시점의 금융부채요소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20×2년 초 전환상환우선주의 40%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감평의 자본증가액은?

- ① ₩32,000 ② ₩34,400 ③ ₩40,000 ④ ₩42,400 ⑤ ₩50,000

5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하며, 거래가격에는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 ②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변동대가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기댓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 ④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 ⑤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52.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③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④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 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3.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 ②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 ③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 ④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4. (주)감평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상각)를 구입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4년 초 (주)감평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가치도 변경하였다. (주)감평이 20×4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0인 경우, 기계장치의 변경된 잔존가치는?

- ① ₩20,000 ② ₩30,000 ③ ₩50,000 ④ ₩70,000 ⑤ ₩130,000

55. (주)감평의 20×1년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년도 상품 매입원가는?
(단, (주)감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에 속하는 매
입세액이다.)

항목	금액	비고
당기매입	₩110,000	부가가치세 ₩10,000 포함
매입운임	10,000	
하역료	5,000	
매입할인	5,000	
리베이트	2,000	
보관료	3,000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
관세납부금	500	

- ① ₩108,500 ② ₩110,300 ③ ₩110,500 ④ ₩113,500 ⑤ ₩123,500

56. (주)감평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400주이다. (주)감평은 20×1년 7월 초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 권리행사 전일의 공정
가치는 주당 ₩50,000이고, 유상증자 시의 주당 발행금액은 ₩40,000, 발행주식수
는 2,000주이다. (주)감평은 20×1년 9월 초 자기주식을 1,500주 취득하였다. (주)
감평의 20×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① 18,667주 ② 19,084주 ③ 19,268주 ④ 19,400주 ⑤ 20,400주

57. (주)감평은 20×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구입
과 동시에 무이자부 약속어음(액면금액 ₩300,000, 3년 만기, 매년 말 ₩100,000
균등상환)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거래 당시 (주)감평이 발행한 어음의 유효이
자율은 연 12%이다.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당해 차입원가는 자
본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년 (주)감평이 인식할 비용은? (단, 12%, 3기간
의 연금현재가계수는 2.40183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
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① ₩59,817 ② ₩80,061 ③ ₩88,639 ④ ₩108,883 ⑤ ₩128,822

58. 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1년도 유효 법인세율은? (단,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20×1년 세무조정 사항
- 벌과금 손금불산입 ₩2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5,000
○ 20×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① 19.27% ② 20% ③ 21.4% ④ 22% ⑤ 22.8%

59. (주)감평이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총당부채는? (단, 아래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사건	비고
20×1년 9월 25일에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예상비용은 ₩300,000으로 추정된다.	20×1년 말까지는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년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동 소송에서 패소 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의 자문 법무법인에 의하면 손해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이 ₩450,000으로 추정된다.	
회사가 사용 중인 공장 건축물 철거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원상복구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며 그 현재가치는 ₩120,000이다.	
판매한 제품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보증비용 ₩350,000이 예상되며, 그 지출가능성이 높다. 동 보증은 확신유형 보증에 해당한다.	예상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50%만큼 변제받기로 하였다.

- ① ₩295,000 ② ₩470,000 ③ ₩550,000 ④ ₩670,000 ⑤ ₩920,000

60. (주)감평은 20×1년 중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지출시기	구분	금액	비고
1월 초 ~ 6월 말	연구단계	₩50,000	
7월 초 ~ 9월 말	개발단계	100,000	자산인식 요건 미충족함
10월 초 ~ 12월 말	개발단계	50,000	자산인식 요건 충족함

(주)감평은 20×2년 말까지 ₩100,000을 추가 지출하고 개발을 완료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는 20×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3년 말 현재 개발비가 손상정후를 보였으며 회수가능액은 ₩80,000이다. 20×3년 인식할 개발비 손상차손은?

- ① ₩50,000 ② ₩50,500 ③ ₩53,750 ④ ₩55,000 ⑤ ₩70,000

61. 다음 항목과 계정 분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재고자산
 ② 소유 자가사용부동산 - 유형자산
 ③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④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재고자산
 ⑤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투자부동산

62.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②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③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④ 계약에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는 않는다.
 ⑤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63. 공기청정기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20×1년 초 공기청정기 10대(대당 판매 가격 ₩1,000, 대당 원가 ₩700)를 (주)한국에 적송하였으며, 운송업체에 총운송비용 ₩1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위탁받은 공기청정기 10대 중 7대를 20×1년에 판매하였다. 20×1년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는?

- ① ₩4,970 ② ₩5,700 ③ ₩7,070 ④ ₩8,100 ⑤ ₩10,100

64. (주)감평은 20×1년 초 주당 액면금액이 ₩150인 (주)한국의 보통주 20주를 주당 ₩180에 취득하였고, 총거래원가 ₩150을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동 주식을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1년 말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40이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0×1년 인식할 기타포괄이익은?

- ① ₩1,050 ② ₩1,200 ③ ₩1,350 ④ ₩1,600 ⑤ ₩1,950

65. (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각각 20개씩 부여하고 2년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감평은 20×1년에 ₩6,000, 20×2년에 ₩6,500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다. 20×1년 초부터 20×2년 말까지 30명의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며, 20×3년 말 종업원 10명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20×3년 말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5, 개당 내재가치는 ₩10이라고 할 때, (주)감평이 20×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 ① ₩5,500 ② ₩6,000 ③ ₩7,000 ④ ₩7,500 ⑤ ₩8,500

66. (주)감평의 20×2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1,500과 ₩600이며, 관련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20×1년 말	20×2년 말
재고자산	₩1,500	₩1,300
미수수익	500	800
매출채권	500	400
미지급비용	600	300

20×2년 순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 ① (-)₩800 ② (-)₩700 ③ (+)₩300 ④ (+)₩400 ⑤ (+)₩600

67. (주)감평은 취득원가 ₩2,500(처분당시 장부금액은 ₩1,500, 원가모형 적용)인 기계장치를 20×1년 초 ₩1,6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처분대가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20×1년과 20×2년 각각 취득원가의 1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20×3년 초 발견되었고, 20×2년도의 장부가 마감되었다면, (주)감평의 2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기 오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 ① 영향없음 ② ₩100 증가 ③ ₩250 증가 ④ ₩500 증가 ⑤ ₩600 증가

68. (주)감평은 재고자산을 20×1년 말까지 평균법을 적용해 오다가 20×2년 초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다. 다음은 20×1년 말과 20×2년 말의 평가방법별 재고자산 금액이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재고자산 금액	평균법	₩2,800	₩2,200
	선입선출법	2,500	2,800

평균법을 적용한 20×2년 당기순이익이 ₩2,000일 때, 변경 후 20×2년 당기순이익은? (단, 동 회계정책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① ₩1,400 ② ₩2,000 ③ ₩2,300 ④ ₩2,600 ⑤ ₩2,900

69. (주)감평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20×1년 말 장부금액은 ₩3,500(취득원가 ₩6,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 원가모형 적용)이다. 20×1년 말 동 기계장치의 진부화로 가치가 감소하여 순공정가치는 ₩1,200, 사용가치는 ₩1,8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기계장치 손상차손은?

- ① ₩1,200 ② ₩1,700 ③ ₩1,800 ④ ₩2,000 ⑤ ₩2,300

70. (주)감평은 20×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하여 2년간 제품보증 조건으로 건조기(대당 판매가격 ₩100)를 판매하고 있다. 20×1년 1,500대, 20×2년 4,000대의 건조기를 판매하였으며,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에 따라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비용은 대당 평균 ₩20이 소요된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연도별 보증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20×2년
20×1년 판매분	5대	15대
20×2년 판매분		30대

20×2년 말 보증손실충당부채는? (단, 보증요청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충당부채의 현재가치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800 ② ₩1,000 ③ ₩1,200 ④ ₩1,800 ⑤ ₩2,300

71. (주)감평은 단일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원가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	3,000개(완성도 80%)
당기착수수량	14,000개
당기완성품	13,000개
기말재공품	2,500개(완성도 60%)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중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30과 ₩20이다. 완성품에 배부되는 정상공손원가는?

- ① ₩35,000 ② ₩44,000 ③ ₩55,400 ④ ₩57,200 ⑤ ₩66,000

72. 원가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약이론을 원가관리에 적용한 재료처리량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매출액에서 기본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② 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이전단계보다는 제조단계에서의 원가절감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 ③ 목표원가계산은 표준원가와 마찬가지로 제조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 ④ 균형성과표는 전략의 구체화와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 ⑤ 품질원가계산에서는 내부실패원가와 외부실패원가를 통제원가라 하며, 예방 및 평가 활동을 통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73. (주)감평은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며, 제품 1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20×1년 3월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10,400시간이고,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23,000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000(불리)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차이	1,000(유리)

(주)감평의 20×1년 3월 실제 제품생산량은?

- ① 4,600개 ② 4,800개 ③ 5,000개 ④ 5,200개 ⑤ 5,400개

74. (주)감평은 제품라인 A, B, C부문을 유지하고 있다. 20×1년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A부문	B부문	C부문	합계
매출액	₩200,000	₩300,000	₩500,000	₩1,000,000
변동원가	100,000	200,000	220,000	520,000
공헌이익	100,000	100,000	280,000	480,000
고정원가				
급여	30,000	50,000	80,000	160,000
광고선전비	10,000	60,000	70,000	140,000
기타 배부액	20,000	30,000	50,000	100,000
영업손익	₩40,000	(₩40,000)	₩80,000	₩80,000

(주)감평의 경영자는 B부문의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급여는 회피불능원가이다.
- 광고선전은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부문을 폐쇄할 경우 B부문의 광고선전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 기타 배부액 총 ₩100,000은 각 부문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부한 원가이다.
- B부문을 폐쇄할 경우 C부문의 매출액이 20% 감소한다.

(주)감평이 B부문을 폐쇄할 경우 (주)감평 전체 이익의 감소액은? (단, 재고자산은 없다.)

- ① ₩36,000 ② ₩46,000 ③ ₩66,000 ④ ₩86,000 ⑤ ₩96,000

75. (주)감평의 생산량 관련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량	
	2,000개	5,000개
총원가		
변동원가	A()	?
고정원가	B()	?
소계	?	E()
단위당 원가		
변동원가	C()	?
고정원가	?	₩10
소계	D()	₩30

- ① A: ₩40,000 ② B: ₩50,000 ③ C: ₩20 ④ D: ₩45 ⑤ E: ₩90,000

76. (주)감평이 20×2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부원가계산보다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30,000 더 많았다. 20×2년 기초재고수량은? (단, 20×1년과 20×2년의 생산·판매활동 자료는 동일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제품품은 없다.)

당기 생산량	5,000개
기초재고수량	?
기말재고수량	500개
판매가격(개당)	₩1,500
변동제조간접원가(개당)	50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750,000

- ① 580개 ② 620개 ③ 660개 ④ 700개 ⑤ 740개

77.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작업시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20×1년 실제 기계작업시간은?

제조간접원가(예산)	₩928,000
제조간접원가(실제)	960,000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840,710
기계작업시간(예산)	80,000시간

- ① 70,059시간 ② 71,125시간 ③ 72,475시간 ④ 73,039시간 ⑤ 74,257시간

78. (주)감평의 20×1년 매출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변동원가	₩700,000
공헌이익	500,000
고정원가	300,000
영업이익	₩200,000

20×2년에는 판매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의 20×2년 예상영업이익은? (단, 판매량 이외의 다른 조건은 20×1년과 동일하다.)

- ① ₩260,000 ② ₩280,000 ③ ₩300,000 ④ ₩340,000 ⑤ ₩380,000

79. (주)감평은 평균영업용자산과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투자수익률(ROI)과 잔여이익(RI)을 산출하고 있다. (주)감평의 20×1년 평균영업용자산은 ₩2,500,000이며, ROI는 10%이다. (주)감평의 20×1년 RI가 ₩25,000이라면 최저필수수익률은?

-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80. (주)감평은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20×1년 (주)감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00,000과 ₩3,000,000이며, 고정원가는 ₩2,250,000이다. 제품A와 제품B의 매출매합비율이 각각 25%와 75%이며, 제품A의 공헌이익률은 23%이다. 제품B의 공헌이익률은?

- ① 29.25% ② 34.4% ③ 35% ④ 37.4% ⑤ 39%